

제목

최근 중국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및 전망

4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부가세 환급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큰 폭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판매수입도 축소되면서 **재정지출 여력에 대한 우려가 증대**되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**하반기중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**도 있는 것으로 전망

1. 최근 재정수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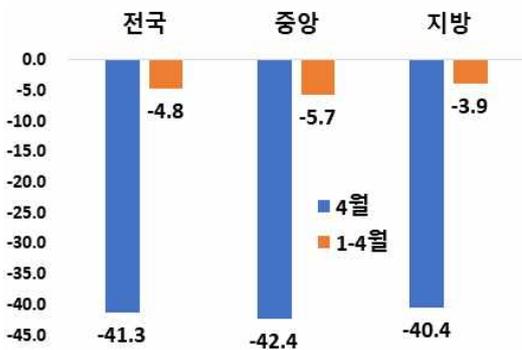
□ (수입)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4월중 전국일반공공예산수입은 1.23조위안으로 **전년동월대비 41.3%** 감소하여 사상최대폭 감소를 기록(5.17일, 재정부)

○ 이는 4월 시행된 **부가세 환급정책\***의 영향으로 국내부가세가 전년동월대비 124.7% 감소(2021.4월 6,303억위안 → 2022.4월 -1,555억위안)한 것이 주된 요인

\*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왔던 부가세 환급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 및 6개 업종 기업에 대해 기업내 부가세 유보액 전액을 금년중 한꺼번에 환급. 자세한 내용은 3.25일 북경사무소 현지정보 「중국정부, 대규모 부가세 환급을 통해 기업 지원」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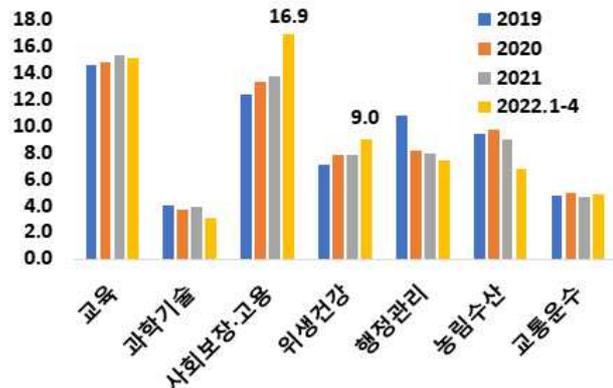
— 부가세 환급 정책이 시작된 4월중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목표액(1.5조위안)의 절반이 넘는 **8,015억위안의 부가세 환급**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공공예산 수입의 37.5%에 해당되는 규모

재정수입 증가율(%)



자료 : WIND, 재정부

주요 부문별 재정지출 비중(%)



자료 : WIND, 재정부

○ 1~4월 누계기준 예산수입은 7.43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.8% 감소

— 세수 수입(6.23조위안)이 7.6% 감소하였으나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 및 광산자원 특별수입 등 비세수 수입(1.20조위안)이 13.4% 증가하여 전체 수입 감소폭은 축소

□ (지출) 코로나19 방역과 영세기업 지원, 고용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1~4월 전국일반공공예산지출은 8.09조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.9% 증가

○ 사회보장·고용 및 위생건강 부문 지출이 일반공공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.9% 및 9.0%로 지난해 연간(각각 13.7%, 7.8%)에 비해 크게 상승

## 2. 최근 재정관련 우려

□ (세수 감소) 부가세 환급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부가세 세수 감소는 예상된 바였으나 최근 중국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여타 세수도 감소세

○ 금년도 「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」에서 정부는 일반공공예산수입을 전년대비 3.8%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

— 부가세 환급 정책의 가속화를 통한 효과 제고를 위해 영세기업과 제조업 등에 대한 환급 시기를 당초 금년 내에서 상반기중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며, 동 규모도 당초 1.5조위안에서 1,400억위안 증액한 1.64조위안 규모로 확대

○ 4월 공공예산수입은 수입(輸入) 부진, 소득 감소,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 주요항목인 수입부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및 개인 소득세, 계약세 등도 줄면서 부가세 환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전년동월대비 4.5% 감소한 상황

□ (정부성기금수입 감소) 부동산경기 약화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대부분을 차지(2021년 기준 88.8%)하는 정부성기금예산수입도 크게 감소

○ 1~4월 정부성기금예산수입(1.76조위안)은 국유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9.8% 감소한 1.5조위안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27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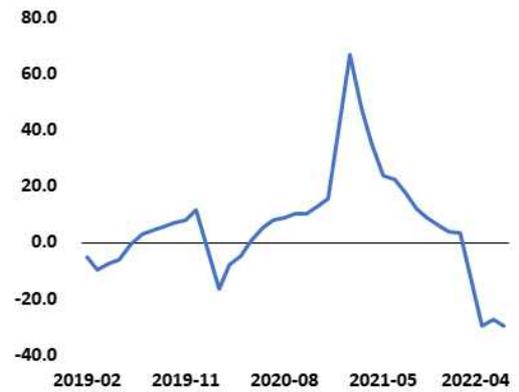
\* 금년중 1회차 토지집중경매에서 텐진(天津)의 경우 30필지중 6필지만이 낙찰되었고 동관(东莞)은 8필지중 2필지, 난징(南京)은 20필지중 14필지만이 거래성사됨(粤开证券)

주요 세수별 증가율(YOY, %)

| 세 목                  | 비중 <sup>1)</sup> | 2021           | 2022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4월            | 1~4월           |
| 총 세수                 | 100.0            | 11.9           | -47.3         | -7.6           |
| 국내부가세                | 36.8             | 11.8           | -124.7        | -28.9          |
| 수입부가세및소비세<br>(수출환급세) | 10.0<br>(-10.5)  | 19.1<br>(33.2) | 0.2<br>(21.6) | 17.8<br>(28.4) |
| 국내소비세                | 8.0              | 15.4           | 14.3          | 15.5           |
| 기업소득세                | 24.3             | 15.4           | -1.3          | 5.3            |
| 개인소득세                | 8.1              | 21.0           | -9.5          | 11.4           |
| 계약세                  | 4.3              | 5.2            | -43.4         | -27.4          |

주 : 2021년 기준

토지사용권 판매수입 증가율(YOY, %)



자료 : WIND, 재정부

□ **(재정지출요인 증대)** 반면 중국정부가 **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**하면서 **재정 지출 증가요인**은 더욱 커지는 상황

○ 방역강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비용인하,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민생보장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으며, 코로나19 핵산검사의 상시화 등 방역활동을 위한 의료부문 지출도 빠르게 증가

— 중국정부는 금년들어 5.16일까지 부가세 환급 1.1조위안, 신규 감세 및 비용인하 1,980억위안, 세금납부연기 3,778억위안 등 총 1.6조위안 규모의 현금흐름을 중소영세기업 등에 제공한 것으로 발표

○ 또한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(5.23일)에서 경제안정을 위하여 **재정 및 금융정책을 망라한 6개 부문 33개 대책\***을 추가 발표하고 5월말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관련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

\*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<참고> 「중국정부의 경제안정을 위한 6개 부문 정책」 참조

### 3. 종합 평가

□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로 **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대응 여지가 점차 축소**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**예산수입의 감소**는 금년 성장 목표(5.5%) 달성을 위한 **중국정부의 정책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임**

○ 금년 계획한 1.64조위안의 부가세환급을 조기에 완성할 경우 하반기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겠으나 부동산경기 둔화로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

—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확대 조치\*에도 불구하고 산업취약, 인구 유출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

\* 금년중 부가세 환급용 특별목적 교부금 0.8조위안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1.5조위안 많은 9.8조위안의 지방교부금을 책정한 바 있으며, 최근 특별목적 교부금을 중전 0.8조에서 1.2조위안으로 확대

○ 반면 재정지출은 당초 예산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인민은행 등 국유기관의 축적이윤(1.65조위안)을 국고로 납입토록 한 재정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**재정적자 규모(목표치 2.8%)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\***

\*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부채(중앙 및 지방)는 2022.3월말 기준 명목GDP 대비 47.2% 수준

□ 한편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, 방역 및 민생정책을 위해 **특별국채\* 발행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**가 대두되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하반기중 특별국채 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(中泰証券, 天风証券, 平安証券 등)

\* 1998년 국유상업은행 자본 보충(2,700억위안), 2007년 중국투자공사 설립(1.55조위안), 2020년 코로나19 대응(1조위안) 등 지금까지 총 3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음

<참 고>

### 중국정부의 경제안정을 위한 6개 부문 정책

| 부 문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
|-----------------|--|
| 재정정책            | 더 많은 업종에서 부가세 환급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년중 환급규모를 당초 2.5조위안에서 2.64조위안으로 1,400억위안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영세기업, 자영업자에 대해 수도.전기세와 임대료 지원 확대.  |
|                 | 중소영세기업, 자영업자 및 해가 큰 5개 업종에 대한 사회보험(양로, 실업, 산재)의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해당되는 업종범위도 확대(금년중 납부유예 총액 3,200억위안 추산) |
|                 | 실업보험 훈련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보험가입 기업으로 확대   |
|                 |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  |
|                 | 금년중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용범위를 신형인프라 투자까지 확대  |
|                 | 국가유자보증기금의 신규 재보증 규모를 1조위안 이상 증액  |
| 금융정책            |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, 화물차 대출,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주택대출, 소비대출에 대해 은행이 연내에 원리금 상환을 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자동차중장기(央企)의 900억위안 상용화물차 대출금은 은행과 기업이 협력하여 원리금 상환을 반년 연기   |
|                 | 금년중 금융포용 영세기업 대출지원프로그램의 한도와 지원비율을 두 배로 확대  |
|                 | 상업어음의 지급기한(만기)을 최장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|
|                 | 플랫폼기업의 국내외 상장을 추진  |
| 산업공급망 안정        | 조업재개와 생산확대 정책을 개선하고 "화이트리스트 기업"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 |
|                 | 원활한 화물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저위험지역에서 온 화물운전자의 통행제한을 취소하고 불합리한 제한규정 및 비용징수 등을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여객 및 화물운송 기사의 타지역에서의 핵산검사비용도 무료 혜택 제공  |
|                 | 민영항공기업에 대한 1,500억위안 규모의 긴급대출과 항공업의 2,000억위안 채권발행을 지원   |
|                 | 순차적으로 국내국제 여객항공편을 증편하고 외국기업 인사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   |
| 소비 및 투자 촉진      | 자동차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, 단계적으로 일부 승용차 구입세 600억 위안을 감면  |
|                 | 도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수요를 지원   |
|                 | 대형 관개사업, 교통, 노후주택 개선, 지하통로관사업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은행이 장기대출을 제공하도록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농촌 도로건설 프로젝트 개시  |
|                 | 3,000억위안 규모의 철도건설채권의 발행을 지원  |
| 공공근로사업(以工代赈) 확대 |  |
| 에너지 안전 보장       | 각 지방별 석탄 생산량 책임을 구체화하고 탄광정책을 조정하여 생산을 확대   |
|                 | 수력, 화력 등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착공  |
| 민생 보장           | 실업 보장, 최저 생활 보장 및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  |
|                 | 사회구호와 보장기준이 물가상승과 잘 연계되도록 보장   |